

데스크시각

김일환



한 달여 전의 일이다. 오후 늦게까지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의 실수로 큰애가 눈 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 순간 당황했다.

한 번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는 곳에서 다친 일이 없어 여쭙힐 바를 몰랐다. 곧 정신을 차리고 큰 애의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치료를 서둘러 주십시오. 얼굴을 다쳤다고 하니 성형외과로 가서 치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1등만 있는 기형적 교육

담임선생은 미안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순간 필자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통명스러워져 있었다. 선생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생각에 짜증이 배어났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큰애의 치료에 잘되어가는 전화를 받았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전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마음이 쓰였다.

치료를 받고 돌아온 큰애에게 자초지종을 몰랐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큰애 반 급우 한 명이 선생님의 지시를 어기는 행동을 했고, 그걸 지적하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과정에서 육설과 함께 선생님의 목살을 잡았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참지 못하고 매를 들었고 그 매를 그 학생이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킁킨 매가 큰애의 눈 위를 맞았다는 것이다.

갑자기 부끄러웠다. 괜히 담임선생에게 통명스럽게 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아이가 다친 것도 다친 것이지만 선생님이 전화를 했다.

교단의 위기 - 인성교육의 위기

참 힘들었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한편으로 분노를 느꼈다. 어찌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아무리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하나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군사부일체'라는 옛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인데..

바로 담임선생에 전화를 걸어 큰애의 일은 걱정하지말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을 위로해줬다.

물론 큰애에 일어났던 일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유사한 일은 교육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교단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보면 겹겹이 10대들을 가르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체벌은 커녕 엄한 훈화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심지어는 거친 학생들이 많은 반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교직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는 푸념도 늘어놓곤 한다.

정말 실상이 그러한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큰일이 아닌가. 도대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본질적인 의문이 들었다.

최근 광주 교육의 성과는 눈부시다. 다른 광역도시보다 성적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능성적도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묻고싶다. 교육당국이 믿고 있는 '실력 광주'에 오로지 성적만 있고 '인성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사람을 보다 사람답게 하는 교육, '난 사람'이나 '돈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1등이 되는 교육이 펼쳐져야 한다.

인성교육은 물질 위주에서 정신 위주로, 머리 위주에서 가슴 위주로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지식 중심의 도덕·윤리교육에서 벗어나 토론, 상담, 사회봉사 등 실천적인 활동을 통한 내면화교육이 필요하다.

커리큘럼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 사제간에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치들도 절실하다.

스승의 권위 되찾아줘야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학부모들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 단편적이고 맹목적인 자녀 사랑은 결국 자신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을 가로막을 뿐이다. 가정에서부터 체질화된 도덕성을 길러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대화와 체험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들에게 지어준 과도한 책임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실제로는 교권을 세워주는 일은 등한시하고 있다. 교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올해는 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위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적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교육'이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요즈음 중·고교생들을 보면 방학이 방학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아이들은 술 쥘 틈 없이 학원가로 내몰리고 있다. 정서함양이나 심산단련은 뒷전이고 1등이 되기 위한 처절한 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공부만 잘하는 괴물들을 키워내는 작금의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교육주체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이 학교가 단순히 입시와 지식전달을 위한 협소한 장소가 아니라 품성과 예절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예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갖추어 나가는 넉넉하고도 열린 공간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기고

김백수



작년 연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청렴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39위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들어 청렴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신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갖자는 분위기와 더불어 그간 기관에 대해 평가하던 청렴도가 올해부터 행정적 고위공무원부터 개별평가 시행된다고 한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의 열풍은 뜨겁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있다 보니 가끔 여러 형태로 표현을 하고자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1만2천여 임직원은 행동강령에 의거 업무 수행 시 제공된 금품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부지사에서 지난 연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렴향상(淸廉向上)의 문(門)'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청렴의식을 가졌다. 이 문의 유래는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께서 궁궐 뜰 안에 3개의 문을 세워

청렴도는 국가 경쟁력

지금 조세제정, 인터넷 신문고 운영 등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듯하다.

며칠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24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주광역시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광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업무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잡한 민원처리절차 등 부패 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내 윤리경영 게시판 운영으로 미담 사례 등을 게시하여 공단 1만2천여 임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으며 연간 계획에 의거 고객에 대한 청렴도 모니터링 실시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공단의 업무가 전 국민을 상대하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업무는 각 시·군·구, 센터 등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청렴한 사람은 청(淸)문으로 보통사람은 예(例)문으로 부정한 사람은 탁(濁)문으로 출입하게 하여 청백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고 한다.

서부지사 직원은 청문의 출입을 통해 공단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여 고공질 고객 최우선 실천으로 부패 없는 공단, 깨끗한 공단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문을 설치하였다.

서부지사 직원은 매일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오늘 하루를 보냈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모두가 청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다짐했다.

청렴을 목숨처럼 여겼던 선비정신을 본받아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면서 청렴도가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고 국제화 시대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장>

인위적인 산림녹화는 숲에 오히려 해롭다

70년대부터 산림녹화 일환으로 인공조림지를 만들고 많은 나무를 심어왔다.

하지만, 이게 적잖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밀도가 높아 태양광선을 차단하므로 다른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저하시킨다. 둘째, 외래종 위주의 침입수는 특정 화학물질을 배출하여 다른 식물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타감작용을 해서 다양한 수종의 숲이 조성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겨울철 인공조림지의 외래수종을 정비하고 나아가 자연림 숲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간벌을 하며, 우리 교육의 토종 숲 개선사업을 하는 결과로이다.

이러한 때에 개인이 소유한 산과 숲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숲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간벌 비용은 물론 절자, 방벌, 시기 등이 모두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안영철·보성군 미력면

시설

'세종시 블랙홀' 이미 시작됐다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기업인 GS그룹의 연료전지 생산업체가 전남(行)을 포기하고 세종시로 발길을 돌렸다. 나주혁신도시 인근에 1천억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공장을 짓는 신규사업을 추진해 왔던 이 업체는 최근 전남 대신 세종시로 투자 지역을 변경했다.

세종시가 기업과 연구기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타지역에서 유치하려는 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5원칙'에도 어긋나는 경우다.

이 대통령은 12일 시·도지사와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장을 받는 양을 것이며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곳은 세종시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다른 기업을 더 유치할 땅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전남에 올 기업이 세종시로 유턴한 사례가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은 설득력

이 없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이 광주시의 미래 주력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지역 역점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가 나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종시와 수도권과 달리 떨어진 광주시·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경쟁이 될 수 없다. 3.3만평값이 36만~40만 원에 불과해 평당 사농아도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데다 각종 세계협력 등이 주어지지 대기업으로서는 세종시 입주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도시에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 등 구체적 없는 대책 들을 내놓고 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세종시만 살리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매입 임대 사업자 횡포 두고만 볼 건가

매입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채의 임대아파트를 구입한 후 이를 일반인들에게 임대(전세)한 사업자가 부도설을 흘리며 갑자기 분양 전환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부도를 낸 뒤 잠적해 세입자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경제 불안에도 휩쓸려 있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세입자 대부분이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매입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광주지역에서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처해 있는 세입자만 1천600여 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올머겨져막기'식으로 경매를 받거나 아니면 고스란히 임대비용을 날릴 판이다.

문제는 이 같은 매입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지역 매입 임대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629개 업체에 1만6천652 가구에 이른다. 이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2배 이상인 부산과 비슷한 수치이고, 대구·울산보다는 2배가 넘는 다. 그만큼 지역의 많은 서민들이 매입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횡포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정부는 말로만 서민보호를 외칠 게 아니라 매입 임대아파트 세입자 보호부터 서둘러야 한다. '내 집 마련'이 평생 꿈인 서민들이 임대 사업자의 농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되풀이 돼서야 법치·복지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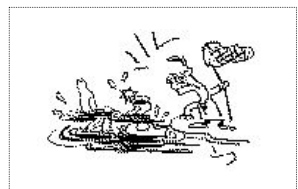
매입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임대보증금 보충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차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매입 임대아파트사업자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無等鼓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수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등 박람회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바다 쓰레기로 박람회 성공 개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금 여수 앞바다는 중국은 물론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 떠 내려온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살아있는 바다'로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라진 내일'의 저자 헤더 로저스는 쓰레기가 '현대 산업사회의 발명품'이라고 단언한다. 소비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쓰레기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문제의 근원은 쓰레기가 양산되도록 유도하는 자본

바다 쓰레기



해자인 셈이다. 바다 쓰레기는 회수가 쉽지가 않다.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해류들은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거대한 물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우리나라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주변은 쿠로시오 해류다. 쿠로시오 해류는 필리핀 동쪽에서 시작해 대만을 지나

일할 생각하면 머나먼 외국에서 쓰레기더미가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답은 간단하다. 바닷물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류로 인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

문제를 이 같은 매입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 인세인 柳濤濟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다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사건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